



# 통일부, 국민과 함께 간다

지난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호(59) 통일부 차관과 정도상(59) 편찬사업회 부이사장이 대담을 나눴다. 서 차관은 지난 5월 24일 25대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담은 차관의 근황과 행보, 역할과 고민, 편찬사업회와 《겨레말큰사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 방향, 남북 교류 정책의 지형도 등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진행 **정도상** 겨레말큰사전 부이사장  
정리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과장  
사진 **이효영** 사진기자



## 통일부에서 깨달은 통일 문제

정도상(정) 바쁘신 가운데에도 ‘겨레말 초대석’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통일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서호(서) 1985년 3월 통일부에 입사했으니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정 통일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 통일 문제에 평생 몸 바치겠다고 통일부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직장은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가치실현의 수단인데, 처음엔 생계유지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가치실현 수단이 되었죠.

정 통일부에서 맡은 첫 보직은 무엇인가요.

서 남북회담본부(당시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일했어요. 1985년 5월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호교환 방법을 북측과 논의했고, 같은 해 9월 20일 ~ 23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어요. 남측 35가족과 북측 30가족이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교환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지학순 주교와 여동생이 상봉한 모습을 현장에서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첫 이산가족 상봉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때 저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대사의 비극을 통일부에서 맡았구나, 느꼈답니다. 진정한 통일부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정 2007년이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통일부에 제안해 문학인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문학 작품에 녹여내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젊은 문학인들을 참관시켰으면 좋겠어요. 현대사의 비극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될 듯하고 좋은 문학 작품이 나온다면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 될 듯합니다. 저도 1985년 첫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엄청난 문학적 충격을 받았죠. 통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서 통일은 시대의 소명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 통일부의 김연철 장관·서호 차관 체제에서 통일 문제를 어찌 다룰지 기대가 됩니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황을 알려주세요.

서 차관이 맡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아래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장이 매주 1회 공동연락사무소에 갔다면 지금은 북측이 올 때 갑니다. 다만 공동연락사무소에 우리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어 매일 한 번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분담합니다. 지금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북측 입장에서 왜 안 올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회담을 마치면 우리가 잘했다고 홍보합니다. 나중에 남북 합의를 보면 거의 이행되지 않았는데 북측만 탓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저는 통일부를 이끄는 정무직을 맡아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풀릴 때 이를 받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부 임직원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인사이동을 크게 했습니다. 통일부라는 조직이 남북회담 등을 잘 받칠 수 있는 그릇 역할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부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지요. 곧 북미 실무협상이 전개될 것이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남북 관계 활성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정**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어 온 분이라 통일부 전체를 정확히 꿰고 있는 듯합니다. 차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나요.

**서** 남북 관계는 부침(浮沈)의 역사, 단속(斷續)의 역사였습니다. 떠올랐다, 잠겼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단속과 부침이 반복된 역사라 할 수 있어요. 저는 대북정책이 왜 지속해서 유지되지 못할까, 왜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왜 오르락내리락할까,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늘 부침과 단속의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969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동방정책’ 모델이 있습니다. 이 외교 정책은 1969년에 시작했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engagement)을 펼쳤다가 봉쇄정책(containment)을 펼쳤습니다.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없었죠. 저는 북한을 봉괴시키기보다 이웃으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북한의 손을 끌어당겨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삶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 남북은 제도적 통일이 어렵기에 서로의 제도와 경제를 인정하면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 특히 대북정책을 ‘색깔론’으로 치부하거나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론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보터(투표자)들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선동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선 통일보다 평화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합니다. 평화로운 남북 관계에서 경제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언젠가 불편함을 느끼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할 시기가 오리라 믿습니다. 유럽 연합(EU) 모델이 있어요. 남한이 북한의 손을 잡고 경제 수준을 우리와 비슷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은 핵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핵을 거둬낼 겁니다. 이렇듯 저는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색깔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 느슨한 정치 · 경제연합을 위하여

**정** 최근 남남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치권만 진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국민도 갈라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서** 국민의 관념이나 정신구조를 바꾸려면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통일부 단독보다 정부 차원



“

‘평화·번영’이 국정 지표입니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

에서 남남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가 필요하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중앙정부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 문제를 협업하기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통일부가 전국 시도지사·교육감과 통일 문제, 통일 교육을 함께 해나가면서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와 공존이 찾아오고 남남갈등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정 거버넌스(governance)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나 아직 내용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번영’이 국정 지표입니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국민에게, 젊은 세대와 중·고등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측면에서 대북정책 내용을 보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평화 국면에서 서해 최북단 어부들은 어장을 넓힐 수 있고,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남북 군사 합의로 밤잠을 빼앗아간 소음이 사라지고,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은 남북 긴장 상태가 해제되는 평화를 봐야 하고 ‘DMZ 평화의 길’을 통한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년 1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약 250km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정 앞서 EU 모델을 말했는데 저는 코리아연합(KU)을 생각해봤습니다. 남북이 각각의 정부가 있는 느슨한 정치·경제연합이지만 핵심은 경제연합입니다. 국가마다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단일한 경제영역을 갖는 느슨한 정치연대 형태로 좁게는 KU 정책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이 평화·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브뤼셀 모델을 거론합니다. 베를린 모델은 동·서 냉전의 상징물로 인식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제도 주권을 단일화시킨 독일 사례입니다. 브뤼셀 모델은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고 화폐를 단일화시킨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사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평화를 말했지만 통일을 말하지 않았 습니다.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북의 제도가 단일화되려면 엄청난 비용(cost) 이 들고 어느 한쪽이 군사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주권을 단일화시킨 사례를 찾기 어렵죠. 더욱이 북한은 주권이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도적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느슨한 형태의 경제연합으로 상호 교류·협력한다면 EU처럼 KU도 화폐를 단일화할 수 있고 언젠가 제도도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화·경제 기반으로 남북 경제가 만주, 시베리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잠재력·과급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정 정책적으로 고유한 언술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방정책, 햇볕정책이 있듯 서호 차관만의 ‘KU’가 있다면 좋을 듯해요. 2010년 교류협력국장 시절 우리 편찬사업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류협력국장 시절 인상에 남은 일이 있네요.

서 2010년 6월 제가 교류협력국으로 왔는데 7월 11일이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고 박왕자 씨 두 번째 기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수소문 끝에 박왕자 씨 아들 방재정 씨를 만났 습니다. 그때 박왕자 씨 아들은 “저희 어머니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 매우 가슴 아픔니다. 이제 어머니를 놓아주시고 다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어떨까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승화시키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남북 교류는 한 번 그만두면 재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아직도 재개되지 못한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방재정 씨를 만났 게 아직도 인상적인 일입니다.

정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 상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펼치는 대북정책, 남북 교류 정책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서 통일부 장·차관은 경색된 남북 관계로 대북지원, 교류협력 사업 등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과

감히 바로잡으면서 책임감 있고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일부가 받쳐주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만약 체감이 안 된다면 설득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셋째는 대북제재를 고려해 남북 교류의 필요한 사항을 우선 협의하고 한미 간 대북제재 관련 협상 후 실행하려고 합니다. 김연철 장관 체제에서 이런 부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 앞서 말한 시도지사협의회와 분권·협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종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도 MOU를 체결해 민·관·학의 그물을 짜서 거버넌스 협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정 총장협의회와 함께한다면 교육부와 통일부가 협의해서 평화·경제, 평화통일 등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면 좋을 듯합니다. 순례길처럼 DMZ 평화의길 횡단으로 현장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학점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기본교육이 될 겁니다.

## 남북언어문화통합을 향해

정 편찬사업회는 2015년 25차 공동회의 이후 공동회의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때 같은 해 12월 평양에서 공동회의를 재개하자고 합의했고, 지난 2월 새해 맞이 행사 때 다시 3월 심양에서 공동회의를 재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측과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제3국을 경유하여 공동회의 개최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서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이질화된 언어를 한 데 묶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큼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언어 소통이 신뢰 구축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겨레말큰사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편찬사업회는 조속히 공동회의를 개최해 사전이 편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 이번에 공동회의가 개최되면 합의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앞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넘어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겨레말큰사전》은 종이사전으로 발행되면 더욱 발전된 웹 사전, 전자사전 형식으로 이행되어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다른 경제용어, 무역용어, 각종 산업 용어 등을 단일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각각의 소사전들을 편찬해야 합니다. 이를 북측과 협의해서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서 사업회법이 2022년 4월까지니 남북언어문화통합 사업으로 전환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회가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하려면 대국민 홍보와 국민 공감



대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언어의 통합은 사회·문화·민족 정체성의 통합이 아닐까 싶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 편찬사업회가 언어문화통합을 준비하듯 통일시대를 위해 국민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서 통일부로서 국민이 통일을 준비하기보다 저희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 국민의 손을 잡고 평화통일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끔 국민과 소통하면서 안심시켜야 합니다.

정 이제 대답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북측과 협상할 때 북측을 굴복시키거나 항복시키려고 해선 안 됩니다. 남측이 지원하고 북측이 받는 처지지만 선한 행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한쪽으로 고정돼 있다면 협상은 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남갈등도 한쪽으로 치우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공적 재원입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감시·감독이 있음을 잘 알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간다’는 기조로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둔 대북정책,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답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